2012. 3. 26. Vol. 13

주간 농업·농촌 동향

주요 농정 이슈
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
FTA 효과 극대화 방안 [농수산식품업 분야]
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

거시경제 동향
2011년 연간 노동생산성 동향

기획 정보
2012 일본 농업소득 보상제도

농정 여론 동향
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

연구 지원 정보
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동 향 분 석 실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 농정 이슈_1 **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**

※ 본 자료는 3월 20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「삼겹살 및 건고추 할당관세 연장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❑ 추진 배경

❍ 정부 **행락철 수급불안에 대비**하여 **돼지고기와 건고추**에 대해 한시적으로 **물량 확보 추진**

- 삼겹살의 경우 **구제역 여파로 급등했던 가격**이 최근 농가의 사육두수 회복에 따른 국내공급 증가 등으로 **안정되고 있으나**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 중 **삼겹살은 19% 수준에 불과**한 반면 소비자들의 삼겹살에 대한 선호가 높아 **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**

  · 행락철 도래로 **구이용 삼겹살 수요가 크게 증가**하여 삼겹살 **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큼.**

- 건고추의 경우 **'11년 하반기 이후 크게 상승한 소비자가격의 안정**을 위해 **할당물량을 확대**하여 연장·적용 필요

❑ 주요 내용

❍ 돼지고기 중 **삼겹살**은 **할당관세 적용기한을 6월말까지 연장**하여 적용물량을 **7만 톤 추가**

❍ **건고추**는 1/4분기 적용물량 6,185톤을 **11,185톤으로 확대**하여 **6월말까지 연장**

·마늘의 경우 5월부터 국산마늘이 출하되어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할당관세 적용을 종료

※ 할당관세: 물가안정, 수급원활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%p 범위의 율(率)을 인하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(대통령령으로 운용)

※ 현재 밀, 옥수수 등 총 103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돼지고기, 건고추 및 마늘은 '12.3.31일로 적용기한이 만료될 예정

❍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부담 완화에 따른 수입 확대로 물자수급 원활화는 물론 국내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.

<할당관세 대상품목 관세율 및 할당물량>

품 목	관세율 (%)		할당물량 (톤)	기 한
	기본	할당		
삼겹살(냉장)	22.5	0	70,000 (4.1일~6.30일)	6.30일까지
삼겹살(냉동)	25	0		
건고추	50	10	11,185 (1.1일~6.30일)	6.30일까지

주요 농정 이슈_2 | **FTA 효과 극대화 방안 [농수산식품업 분야]**

※ 본 자료는 3월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(기획재정부 장관주재)에서 한·미 FTA 발효를 계기로 「FTA 효과 극대화 방안」에 대한 논의 안건 및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·정리한 것임.

❑ 추진 배경

❍ 한·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**FTA 발효**는 **8건*, 45개국으로 확대**

※ 칠레, 싱가포르, EFTA(4), 아세안(10), 인도, EU(27), 페루, 미국

- **세계 경제규모의 60% 수준**까지 경제영토가 확대되고, **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1/3 이상**을 FTA 체결국과 교역

※ 향후 호주, 캐나다, 중국, 일본 등과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것을 가정할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90%까지 확대될 전망

❍ **한·미 FTA효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**에서 벗어나, **수출확대·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·국내산업 경쟁력 강화·소비자 후생증대** 등 **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** 필요

- **관계부처·유관기관 합동**으로 **대책 마련**

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분야별 중점 과제

❍ **(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) FTA활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**하여 컨설팅·정보제공 등 **기업들의 FTA 활용역량 강화 지원**

❍ **(FTA 허브 이점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성화) FTA 허브이점을 활용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도모**하고, **외국인 투자제도 개선**도 지속 추진

❍ **(보완대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)**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**농수산식품업, 제약산업 등 피해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**하는 전기 마련

❍ **(소비자 체감 효과 극대화)** FTA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**수입품 가격정보 공개, 유통구조 개선** 등 대응방안 마련

❑ 농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

❍ **(해외시장 개척지원)** FTA로 우리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도 동시에 개방되기 때문에 **공격적 해외시장 개척** 추진

- **관세이점활용, 현지 유통망진출 등**을 통해 **대미·대세계 수출을 크게 확대**해 나갈 예정

※ 대미 수출(억 불): ('10년) 5.2 → ('11년) 6.0 → ('12년, 목표) 7.0
대세계 수출(억 불): ('10년) 58.8 → ('11년) 76.9 → ('12년, 목표) 100

- 특히, 성장 가능성과 농어가 소득효과가 큰 **인삼, 김치, 김, 굴 등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해 중점 지원**

❍ **(경쟁력 강화)** 농어업 **생산비 절감** 및 **생산성 향상** 추진

- **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***하여 '17년까지 **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**

※ ('11년) 2,450억 원, 12,149개소 → ('12년) 7,002억 원, 17,254개소

※ (생산성 향상추진) 가축폐사율(19.5→10%), 모돈당 출하수(15→22두), 고추생산(232→630kg/10a), 과수노동력(10%절감) 등

- 아울러, **면세유 공급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,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, 수입사료 무관세확대** 등 **농어가 경영부담 완화**

❍ **(R&D지원 및 브랜드육성) R&D투자 확대**를 통해 **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보유에 주력**하는 한편 **고품질 우수브랜드 개발**

- 기술수준: '17년 세계 최고 대비 85%('09: 67%) 달성 목표

❍ **Golden Seed*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**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※ 글로벌 수출전략형 종자(벼, 감자, 배추, 고추, 무 등)를 20개 이상 개발

❍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**국내 농수축산물 고품질 우수브랜드***를 **지속적으로 육성**

※ 안성맞춤(안성지역 무공해 쌀, 한우, 배, 포도, 인삼 등 5개 품목 유통)

❑ 소비자 체감 효과 극대화

❍ **(FTA 관련 정보의 소비자 제공 확대)** 소비자에 대한 **FTA 수입품목의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**하여 **소비자 감시기능 활성화**

- **소비생활과 밀접한 품목위주**로 **수입평균가격과 소비자가격을 공개**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

- **품목별 수입가격(관세청)과 소매가격(농산물유통공사)** 차이 정보를 **스마트컨슈머*와 연계**, 모바일 어플 등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정보 제공

※ 소비자 종합정보망으로 '12.1.11일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(공정위)

❍ **(유통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등 유통구조 개선)** FTA 관련품목의 **수입가격과 소비자 가격차가 큰 품목을 도출(소비자원)**하고, 이들 품목에 대해 **유통과정상의 불공정 행위 조사**

- **주요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용역**과 **물가관계장관회의, FTA 국내대책위원회** 등을 통해 **FTA 주요수입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방안 검토(재정부)**

❑ 향후 추진계획

❍ **각 부처가 소관분야별 추진과제**에 대해 세부 **시행계획을 수립**하여 차질 없이 추진

- **'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'**를 통해 **추진상황을 점검**하고, **각 기관 간 역할과 기능**을 **유기적으로 연계·조정**

- **논의된 주요사항**에 대해서는 **FTA 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**

주요 농정 이슈_3 | **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**

※ 본 자료는 3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「한단계 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를 축산농장에 최초 도입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❑ 추진 배경

❍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('11.8.4)에 따라 우리 검역검사본부 고시인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'을 제정하여 시행

※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: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**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**하는 **소·돼지·닭·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**하고,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**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'를 표시**하게 되는 제도

❑ 주요 내용

❍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인증은 **금년에 최초로 산란계 농장에 도입 시행**하는 것으로, **산란계농장에서 인증**을 받고자 할 경우는 아래의 **기준을 준수**하여야 함.

※ 시행일: 2012년 3월 20일

- 사육과 관련된 기록내용(입식·출하현황, 청소 및 소독내용, 사용 약품 등) **2년 이상 기록·보관**

- 농장내 사육시설은 **폐쇄형 케이지에서 지속적인 사육 금지**, **산란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1개 이상**

- 사육밀도는 **바닥면적이 1㎡당 9수 이하**(성계 기준)

- 하루 **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**와 **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**가 이루어지고, **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 이상**

- 방목을 하는 경우, **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.1㎡ 이상**이어야 하고, **계사**

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

❍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절차

- ①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 → ② 서류 심사(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) → ③ 현장심사 실시(현장심사 세부일정에 대해 신청자에게 사전 통보) → ④ 인증 평가기준에 따라 농장평가 실시 → ⑤ 농장평가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를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사 → 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명의의 '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'를 교부

· 전체적인 인증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

※ 제출서류: 인증신청서, 축산업등록증 사본, 축산농장 운영현황서

❍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금년도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**2013년에는 돼지, 2014년에는 육계,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** 사육농장 등으로 **축종 확대**

〈 참 고 〉

❍ 우리나라 산란계 농가 수: 1,400여 농가 ('11. 12월 기준)

❍ 산란계 10,000수 수준 사육 농가 수: 300여 농가

- 대규모 사육농가는 대부분 케이지형 사육형태로 동물복지 농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

❍ '12년도 인증심사 신청 농가(추정): 약 50개소

- 참고로,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친환경축산, 무항생제축산, HACCP 인증축산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산형태를 의미

거시경제 동향 | 2011년 연간 노동생산성 동향

※ 본 자료는 3월 22일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「 '11년 연간 및 4/4분기 제조업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동향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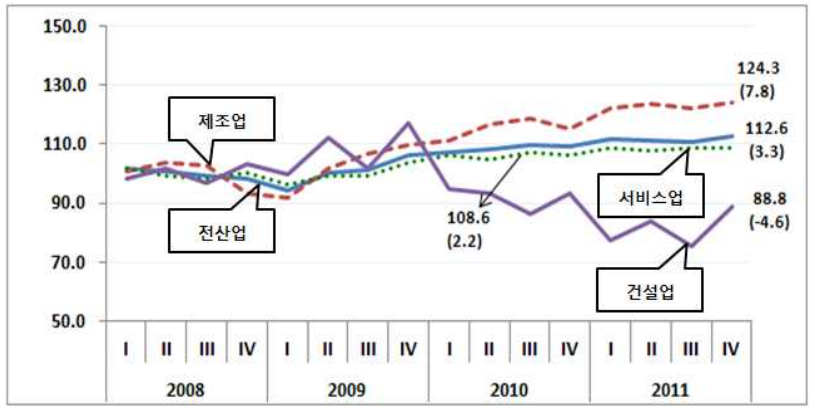
❍ **2011년 연간 전산업 노동생산성**이 **2010년 대비 2.8%**('08년 이후 지속 상승세) **증가**하였으며 **노동생산성지수는 111.6으로 최고치**를 기록

※ 노동생산성지수: 산출량지수 ÷ 노동투입량(근로자수×근로시간)

- 2011년 노동투입의 증가(1.2%)이상으로 산출량이 증가(4.0%)하면서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는 선순환을 보임.

<전산업 노동생산성지수 추이>

단위: %(2008=100, 전년 동기대비)



❍ (제조업) 연도별 **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**(산업생산÷노동투입량지수)는 **123.0으로 전년대비 6.5%증가**하며 **'08년 이후 3년째 상승세 지속**

- (산업생산) **제조업 생산은 전년대비 7.0% 증가**하며, '10년 산업생산의 두 자릿수(16.8%) 증가의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**견조한 상승세 지속**

- (노동투입) **근로자수는 전년대비 1.6% 증가**한 반면, **근로시간은 전년**

대비 1.1% 감소. 2009년 이후 수출과 제조업의 고용흐름이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여 수출이 고용증가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.

- (규모별) 2011년 대기업(3.7%)과 중소기업(3.7%)의 노동생산성 상승세 지속

❍ (서비스업) **2011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08.5로 전년대비 2.2% 증가**해, 완만한 상승세 지속

- 이는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(3.3%)이 노동투입량 증가율(1.1%)을 상회한데 기인하며, 근로자수(1.0%)와 근로시간(0.1%)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

- (부문별) 금융·보험업(9.9%), 보건·사회 복지업(6.6%), 하수·폐기물 처리업(5.0%), 도소매업(4.3%), 협회·개인서비스업(3.0%), 사업시설관리·지원서비스업(2.2%)은 2011년 서비스업의 평균증가율(2.2%)을 상회

  · 반면, 예술·스포츠·여가관련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(-11.0%)은 생산(2.3%) 증가보다 노동투입량(15.0%)이 큰 폭으로 늘어나며, 노동생산성 하락

기획 정보	2012 일본 농업소득 보상제도

※ 본 자료는 2월24일 농진청에서 발표한 「2012년 일본 농업소득 보상제도」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.

❑ 개요

❍ 일본 농림수산성은 항시적으로 생산비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작물을 대상으로 그 차액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국내생산능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.

❍ 전략작물로의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농업인 호별 소득 보상제도를 설정

❑ 현황 및 문제점

❍ 농업인의 평균 연령이 66세로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난 20년간 농업소득 감소

❍ 곡물시장의 국제투기 자금 유입과 바이오 연료 수요급증, 개방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 증대, 기상이변 등으로 세계 곡물수급 불안정

❍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산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회복하고 농촌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

❑ 정책목표

❍ 자급률 향상을 위한 전략작물을 2020년까지 65만 ha로 면적 확대

❑ 주요내용 및 예산

❍ (총 예산) 690,070백만 엔

<보상제도에 대한 세부내용>

단위: 백만 엔

구 분	예 산	지 원 내 용		지 원 액	대 상 자
밭작물 소득보상 교부금	212,302	보리, 콩, 사탕무, 전분용 감자, 메밀, 유채종 등 생산수량 목표에 따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**표준생산비용과 표준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교부금 직접 교부**		수량기준-표준생산비용과 표준판매비용 **차액의 단위중량 기준단가** 면적기준-10a당 20,000엔	판매농가, 집락영농
논 활용 소득보상 교부금	228,431	논에서 보리, 콩, 쌀 가루용 쌀,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쌀 수준의 **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적기준으로 지원**	전략작물조성	콩, 사료작물-10a당 35,000엔 쌀가루용 사료용 쌀 등-10a당 80,000엔 메밀, 유채씨, 가공용 쌀-10a당 20,000엔	판매농가, 집락영농
			이모작 조성-주식용 쌀과 전략작물 혹은 전략작물 간의 조합으로 이모작하는 경우	10a 당 15,000엔	
			농경과 축산 연계 조성-사료용 쌀의 볏짚 이용, 논에 방목, 자원순환 등에 교부	10a 당 13,000엔	
			산지자금-지역진흥작물과 비축미 생산 등에 대한 활동 지원		
쌀 소득보상 교부금	192,900	쌀 생산 수량목표을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서 **표준생산비용과 표준판매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교부금 교부**		(경영비+가족노동비)의 80% 지원 10a당 15,000엔	판매농가, 집락영농
쌀 가격 변동보전 교부금	29,400	쌀 생산 수량목표에 따라 생산하는 농업인에 대해 **전년산 판매가격이 표준판매가격을 밑돌 경우, 차액분 지원**			
가산조치	15,000	규모 확대 가산(10,000)-**경영규모 확대시 교부금 지원**		10a당 20,000엔	
		재생이용가산(4,000)-경작포기지 재활용 계획에 따라 밭경작포기지에 보리, 콩, 메밀 및 유채씨 재배시 지원		평지조건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 평지-10a당 20,000엔 조건불리지역-10a당 30,000엔	
		녹비윤작가산(1,000)-윤작작물 간 1년 휴경하여 **지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작물 재배**하여 환원하는 경우		면적에 따라 지불하며 10a당 10,000엔	
		집락영농의법인화 등에 대한 지원-**집락영농이 법인화 할 경우,** 사무비용 조성비와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		사문비용 조성비-정액 40만 엔	
농업인호별 소득보상제도 추진사업	11,037	**시스템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** 및 생산수량목표설정 작부면적확인 등을 실시하는 도도부현, 시정촌을 지원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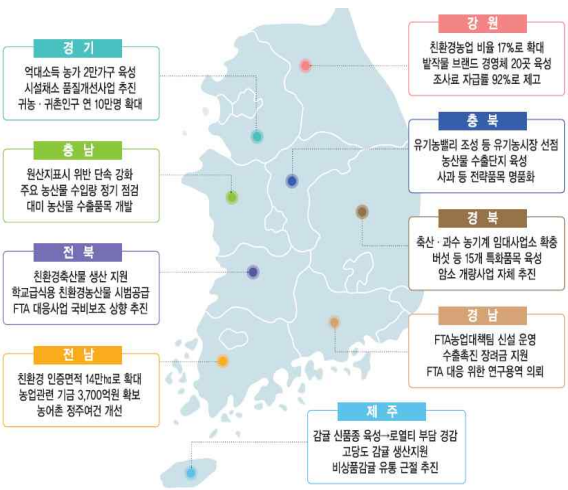
농정 여론 동향 | **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**

※본 자료는 3월 19일~23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 · 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❑ "농업 절대 포기못한다" … 정부대책에 '플러스 알파'

❍ **한·미 FTA 발효로 농업분야가 가장 큰 피해. 향후 15년간 농업생산액 12조 2,252억 원 감소**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. 이에 따라 **각 지자체는 피해 보전 및 농업경쟁력 강화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**

< 한·미 FTA 발효…지자체 농업분야 대응 >

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19).

❑ 물류비 총액한도제 농가불만 팽배

❍ **정부, 올해부터 수출물류비 감소 위해 총액한도제※ 실시해 수출농가들의 불만 팽배**. 지난해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출대금에 비례해 농가에 물류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총액한도제로 묶으면서 **농가들이 받는 물류비 큰 폭으로 감소. 정부에서 표준물류비(kg당 보조금 형태) 기준으로 물류비를 지급**하면서 **농가의지와는 관계없이 항공, 선박, 권역 등에 따라 물류비 차이가 심하게 발생**

※ aT(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)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중앙정부 10%, 지방정부 25%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중앙정부의 물류비 못 받음.

자료: 원예산업신문(2012.3.21).

❑ 농축산물에 '저탄소 인증' 부여

❍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및 국가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위해 **올해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시범사업※ 추진**. 2012~201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, 2014년부터 본 사업인증 실시해 향후 축산물, 수산물(양식)까지 분야 확대. **1차 농·축·수산물에 도입한 것은 세계 최초**…2013년까지 쌀, 깻잎, 상추, 사과, 배 등 5개 품목 시범 추진 계획

※ 일반 농축산물에 비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. 예를 들어 관행농업으로 쌀 1kg을 생산할 때 평균적으로 논에서 온실가스 약 1.49kgCO_2 가 배출된다면 저탄소 쌀은 간단관개(물걸러대기) 실시, 비료·농약 등 외부 투입재 감축 등 검증된 저탄소 농법을 활용해 쌀을 생산,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행농법보다 줄인 것을 뜻함.

자료: 한국농어민신문(2012.3.22).

❑ 건고추… 수입 10만t 올찍…생산위축 더는 안돼

❍ 정부, 3.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, **건고추 자급률 2011년 44%에서 2017년 65%까지 증대.** 이를 위해 비가림시설 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리고, 현대화된 고추종합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. 지난해 생산·자급률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1년(연산기준)으로 **자급률 44% 추산…역대 최저. 수입의존 갈수록 심화**…2011년(연산기준) 수입량은 11만4,000t(추정). **기계화 확대·비축제 도입 추진**하는 것이 중장기적 보완 과제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21).

❑ 국산 고춧가루값 30% 내린다

❍ **정부, 3.1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물가대책 마련. 건고추값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할당관세(50%→10%)를 6월 말까지 연장, 물량 6,185t→1만 1,185t으로 5,000t 증가**시킴. 국산 고춧가루의 경우 농협 매장을 통해 이달 말까지 30% 할인된 수준으로 판매, 수입건고추는 3월 말~7월에 일반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30%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. 이외 알뜰주유소 조기 확대 및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19).

❑ 물가당국 너무 앞서간다

❍ 정부, 물가관리 차원에서 **주요 농축산물 수입 대폭 늘리기로 해 논란**. 물가당국, 최근 삼겹살과 건고추의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대폭 증량하기로 한 데 이어 **봄철 배추 수급불안에 대비해 중국산 배추 수**

입도 적극 검토 중. 농축산물값 오를 기미 보이면 수입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 **생산자단체들은 물가안정 측면만을 우선해 수입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산 농축산물 가격 하락, 농가가 피해를 입는 등 시장에 큰 부작용이 발생**한다는 입장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23)

❑ 마을회관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

❍ 정부, 3.19일 경기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**'농어촌 현장 애로 해소 및 규제 개선 회의'**에서 **'농어촌 규제 부담 완화방안'**을 **발표.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지역 마을회관에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방안 추진**, 면 단위 지역 가운데 **영유아가 10명 내외인 곳은 지역농협이나 마을 단위 공동경영체가 보육시설 사업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**. 이 외에도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의 의사·간호사, 병실 기준도 도시의 절반 수준으로 현실화, 섬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 정원도 축제 등 시기별로 조정, 전통주의 통신판매 관련 규제가 완화돼 성인 인증수단으로 범용인증서뿐 아니라 금융기관인증서도 허용되고 하루 구매한도도 50병에서 100병 증가

자료: 농민신문(2012.3.21).

연구 지원 정보 | **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**

※ 본 자료는 3월 15일 통계청에서 발표한「2011 한국의 사회지표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.

❍ (총인구) **총인구는** 203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**2060년에는 -1.0%로 성장 감소** 전망

❍ (등록외국인) 2011년 장기체류 등록외국인은 98만 2,461명으로 전체인구의 1.97%

❍ (1인당 국민총소득) **2010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 759달러**

❍ (종사상 취업자) 2011년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71.8%

❍ (학생 수) 2011년 초·중·고등학교의 학생은 698만 7천 명, 매년 감소

❍ (교원 수) 2011년 초·중·고등학교의 교원은 42만 2천 명으로 매년 증가

❍ (교사 1인당 학생 수) 2011년 초·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 17.3명

- 초·중학교 교사 1991년 대비 각 17.1명, 6.9명이 줄어 교육환경 개선

❍ (대학진학률) 2011년 대학진학률은 72.5%,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아

❍ (사망원인) 2010년 사망원인 1위는 암

❍ (노인의료비) 2010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는 13조 7,847억 원으로 31.6%

❍ (쌀·육류 소비량) **2011년 쌀 소비량**은 **1인당 하루 195.0g**

- 육류 중 **돼지고기는 52.9g, 닭고기는 29.3g, 쇠고기는 24.1g**

❍ (주택보급률) 2010년 주택보급률은 112.9%

- 주거공간은 주택당 83.4㎡, 가구당 67.4㎡, 1인당 24.9㎡

❍ (교통기반시설) 2010년 도로연장은 10만6천km, 도로밀도는 1.05km/km2

- 철도거리는 3,557km, 지하철 건설연장거리는 537km

❍ (이동전화 가입자) 2011년 이동전화 가입자는 5,251만 명

- 1인당 1대 이상을 보유

❍ (전자상거래) 2011년 전자상거래 규모는 999조 2,500억 원

- 사이버쇼핑 총 거래액은 29조 620억 원

❍ (에너지 소비량) 2010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1억 9,383만 2천TOE

-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량은 3.92TOE, 1인당 전력소비량은 8,883kwh

❍ (노인복지 생활시설) 2010년 노인복지생활시설은 4,150개

-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양로시설, 노인의료 복지시설은 요양시설이 대부분을 차지

❍ (교통사고) 2010년 발생한 교통사고는 22만 6,878건

- 교통사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.1명, 부상자는 하루 평균 965.6명

❍ (범죄발생) 2010년 범죄 발생건수는 191만 7천 건, 절도가 가장 많음.

- 강도와 폭행 등의 범죄는 감소세이고, 절도와 강간 등의 범죄는 증가세

❍ (자원봉사활동) 2011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는 2006년(14.3%)보다 5.5%p 증가한 19.8%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

- 아동・청소년・노인・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이 가장 많음.

❍ (기부인구) 2011년 사회복지단체 등에 후원금(기부금)을 낸 사람은 34.8%

- 후원경로는 모금단체를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음.

※ 자료 작성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